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9.(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6. 1. 28.(수)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기후부, 녹색전환·산업혁신 가속

- 연도별 감축 이행안 수립, 이행체계 개편으로 정책 실행력 제고
-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기반 기술·재정·제도 혁신으로 전 세계 녹색산업 진출 위한 성장동력 확보
- 범국민 기후행동 확산과 복지망 강화로 포용적 기후 안심 사회 구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1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2 경제 · 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 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3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 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6640)
		담당자	서기관	안드레 (044-201-6646)
		담당자	서기관	송인준 (044-201-6641)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서기관	김나승 (044-201-6679)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담당자	사무관	윤재웅 (044-203-3955)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01-6560)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5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2026년
1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공고화	
■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년까지 설정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31~'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新)
■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 2.6조원	■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 2.9조원(强) (전년대비 10.8% 증가,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증가율)
■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1~'25) - 배출허용총량 30.10억 톤 - 6개 부문(전환·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기타) - 유상할당 비율 10%(탄소누출업종 무상할당) - BM할당 대상: 62%, BM계수: 가중평균	■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6~'30) - 배출허용총량: 25.37억 톤 (强) - 2개 부문(발전·발전外) -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차등* 적용(强) * ▲(발전) '26 15% → '27 20% → '28 30% → '29 40% → '30 50%, ▲(발전外) 15%, ▲(탄소누출업종) 무상할당 - BM할당 대상: 77%, BM계수: '30년 상위20%까지 단계적 상향
■ 제3차('21~'25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범실시	■ 제4차('26~'30년) 국가 기후위기 적극대응대책(强)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확대(强)
■ 에너지바우처 지원 130.7만가구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4.7만가구 ■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5.4만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 144만가구(强)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 포함(新)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12.6만가구(强) ■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5.6만가구(强) ■ 연탄가구 연료전환 지원(新)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12개 항목)	■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21개 항목)(强)
2 경제·사회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 설비운전·연구개발 등 기업수요·특성과 괴리된 설비투자 위주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관련 운전자금도 금융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 (强) ■ 금융지원 시 조선·건설업 등 업종특성을 고려해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新)
■ 감축성과와 무관한 기업규모별 금융지원	■ 기업규모별 이자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감축효과별 차등지원 강화 (强)
■ 감축계획 검토비용(5~7백만원 이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금융지원사업 참여 제한	■ 녹색여신 인증서로 중소·중견 감축계획 검증 대체·간소화하여 접근성 제고 (强)
■ 구매보조금 중심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 내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시 내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 지급(新) ■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에 대해 대당 최대 1~2억원 저리 융자 지원(新)
■ 전기차 화재불안 해소를 위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도입으로 화재 사고 책임 주체 판단이 어렵거나 피해액이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초과분 보상(强)

■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광고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삭제 또는 수정 의무 없음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임원·종업원이 환경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인증취소 사유 아님	■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 수정 또는 삭제 의무화(新)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임원·종업원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사유(新)
3 탄소감축을 위한 수소·열에너지 혁신	
■ 3.3MW급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	■ 10MW급 핑크수소 생산시설 착공(新) ■ 20~50MW급 그린수소 예타(면제) 신청(新) ■ 수전해 성능평가 센터 준공(영광, 평택)(新)
■ 수송용 수소 수급관리 - (수요) 15,000톤 - (공급능력) 32,000톤	■ 수송용 수소 수급관리(强) - (수요) 최대 30,000톤 - (공급능력) 34,000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사업 추진	■ 수소사업을 규율하는 「수소사업법」 제정(新)
■ 공기열 재생에너지 대상 미포함 ■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新) ■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新)
4 글로벌 기후에너지 리더십 제고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 탈탄소화 및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强) ■ 에너지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중심 전략적 양자 파트너십 추진과 재생 중심 전환(强)
■ 사업자를 위한 국제감축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 분야별·지역별 G2G 사업모델 마련(强) ■ 사업유치국 대상 국제감축 레디니스 시행(新)
■ COP30 계기 기존 이니셔티브(탈석탄동맹) 가입 ■ UN사무총장 등 양자면담 진행	■ COP31 대비 한국주도 탈탄소 녹색문명 가속화 이니셔티브 마련 추진(强) ■ K-GX 국제포럼 4월 개최(新)
■ 수자원·폐기물 등 환경 분야 ODA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전략형 ODA 확대(强)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23.1) 이후 現 74개 기관(정부·공공 15개소, 건설엔지니어링 59개소)	■ 얼라이언스 확대(재생e+탄소 분야)(强) ■ 녹색TF(민간 수요 대응)+에너지TF(정부주도) 협력체계로 기업 수주지원 강화(新)
■ 녹색산업 해외수출 펀드 하위펀드 조성 등 해외진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 KGX, 에너지전환, 탄소감축 분야 투자 강화 및 투자 다변화(지역, 분야, 중소중견) 추진(强)